



2024년 정신건강지원 예산 증액에 대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의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실천하고 연구하는 전문학술단체로, 2024년 정신건강지원 예산을 132.9% 증액하여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예산 증액을 환영하며, 우리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정신건강 지원 예산 증액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규모로는 현재 정신건강 현장에 산재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서구에서와 같이 정신건강 예산이 정신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래치료명령제 실행, 집중사례관리 체계 강화, 권역별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절차보조사업, 위기쉼터 설치, 지역사회기반의 회복지원서비스 확대, 정신재활시설 확충, 지원주거 확대, 동료지원, 정신건강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성 보장 등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체계를 확장 및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학제 정신건강전문가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구성 및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 예방, 시의적절한 개입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로 인한 충격적 사건의 핵심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인프라의 부족과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유명무실이 그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외래치료지원제도(AOT)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래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한 폭넓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개인에게 뿐 아니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에도 치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신응급센터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12개소 이상으로 증설하여 늦지 않게 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자의 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자의 입원을 예방하는 위기쉼터를 확충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입원 치료과정에서도 당사자의 권익보호와 치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에서도 영국은 독립정신건강옹호서비스(IMHA)를 통해 정신 질환자가 치료와 요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위기쉼터를 운영해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 및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 관리에 효과를 보여온 해외의 선진 제도를 모델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회복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재활시설, 지원주거, 집중사례관리 등의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서비스 확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회복과 적응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가 더욱 촘촘히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를 확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정신건강 상담 및 회복을 지원, 그리고 위험군 조기 발견 등의 기능을 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기관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사회적응 및 복귀 등을 포함하는 회복지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거시설의 확충과 전국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가 인정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 보장 등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체계의 확장 및 강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국민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 예방, 적극적인 치료와 정신건강 상담 및 회복을 지원하며, 위험군 조기 발견 등의 주기능을 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제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수련제도를 통해 국가가 훈련시키고 인정한 전문가이다. 따라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정신건강전문인력의 전반적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법적 갈등으로부터 보호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시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재난심리지원 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20명~45명의 정신장애인을 사례관리하고, 자타해 위험이 있는 급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을 수시로 수행하며, 안전과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2023년 08월 30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